

위기의 축산업... 이제 유기축산만이 살 길

전남 AI 확진 5곳 무항생제 인증 농가 축사 조건 개선 동물 복지 차원 접근을

전남을 뒤덮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중 5곳이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창궐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한 원인이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축산 인증 제도를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영암·나주·화순·장흥·여수 등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은 19개 농가 중 5개 농가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무항생

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서 3km 이내에 위치, 사육중인 오리를 전량 살처분·매몰 처분했던 농가 2곳도 고병원성으로 변이되는 'H5'형 AI가 확인된 만큼 이들 농장까지 포함하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7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것이다. 고병원성 AI가 전염력이 강한데다, 이들 농가 중 일부가 최초 AI 발생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농가라고는 하지만 친환경 축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친환경축산인증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유기축산으로 나뉘는데 이

번에 고병원성AI 확진을 받은 농장들은 모두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들이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지난 2007년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의 선호에 부응하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국내에만 있는 인증제도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일체 먹이지 말아야 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엄격한 선별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무항생제 축산은 '유기 축산'과는 다르게 축사 조건과 동물 복지 측면 등에서 상당히 느슨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양계업자들의 견해다.

예컨대 산란용 오리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이 일반 축사기준(마리당 0.333㎡)보다 훨씬 넓은 0.55㎡에 달하고 한우·젖소 등은 축사 전체면적의 2배에 달하는 방목지나 운

동장을 확보해야 유기 축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기 축산의 경우 사료도 유기사료만을 줘야 하는 만큼 일반축산에 비해 3배가량 경영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 때문인지 유기 축산 인증을 받은 담양·나주의 닭 농가와 고흥의 젖소 농가 등 3곳에서는 1건의 의심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무항생제 축산 인증의 경우 사육 기준이 '유기축산'과 달리, 축산법에 따른 일반 사육 기준만 적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밀집 사육 방식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녹색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 시설 개선에 공을 들여 전국 1위(2028 농가)의 친환경 축산 인증 농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가 3곳을 제외하면 모든 농가가 이같은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인 만큼 안심할 처지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전남도가 친환경 녹색 축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인증에 만족하는 게 아닌, 유기 축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유기 축산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기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 및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항생제 축산 인증 기준을 강화하거나 유기축산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분위기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항생제 축산은 유기 축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며 "유기 축산을 확대하기 위한 주변 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내용

6자리 우편번호 5자리 구역번호로 행정관할구역 세분 '기초구역' 도입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공공기관마다 관할 구역 등을 설정할 때 각자 적용해 온 기준을 통일한 '국가 기초구역'을 2014년까지 도입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담당 구역을 정하거나 국가기관이 행정 통계를 낼 때 지역을 최소단위로 나누는 기준이 법정동, 행정동, 지번 등으로 제각기 달랐다.

행안부는 읍·면·동을 지형이나 인구,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8~9등분해 '기초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기초구역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읍·면·동이 3474개여서 기초구역은 3만여개가 설정되며, 기초구역이 5자리의 숫자로 표시됨에 따라 우편번호도 현재의 6

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행안부는 국토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인 '지점번호'도 만들기로 했다.

건물이 없어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없는 산과 바다 등을 표시할 때 소방서와 해양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용한 방식이 각자 달랐다.

행안부는 국토를 가로 100km, 세로 100km의 격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지정 위치를 표시할 예정이다. 지점번호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선 이용된다.

행안부는 도로명 주소 추진을 위해 작년에 예비 안대를 했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검토해 주소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도 도로명 주소 방식에 맞춰 지점, 시설명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국의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여수산단 정전사태 책임공방 가열

GS칼텍스 “누전으로 설비 고장”

한국전력 “독립설비 영향 없다”

지난 17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 사태의 원인을 놓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GS칼텍스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책임공방이 뜨겁다.

GS칼텍스는 “여수화력발전소가 과부하를 우려해 여수화력-GS칼텍스 간 전용 전력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이번 정전은 수요 기업이 순간 전압강하에 대한 보호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한전 책임론’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 보호장치를 200여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선로 의도적 차단했나=한전은 19일 여수화력발전처 내

에 있는 13개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가운데 사고 당시 용성선로는 파손됐고, GS칼텍스 2개 선로 중 1번 선로의 개폐장치가 열려 전기 공급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13개 선로 중 수요 기업 선로는 LG 석유화학 1개, GS칼텍스 2개 등 3개이며, 나머지는 용성발전소와 여천발전소가 관리하고 있다.

한전은 이날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GS칼텍스 2번 선로는 사고 당시 정상 작동했다”며 “한전이 의도적으로 2개 선로를 차단해 정전을 유발했다는 GS칼텍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일 13개 선로 중 용성선로와 GS칼텍스 1번 선로는 이상이 있었지만, GS칼텍스



지난 17일 오후 여수산단 정전 사고를 일으킨 여수화력발전처 내 가스절연개폐장치. 사진 왼쪽은 사고가 발생한 용성변전소 선로이며, 오른쪽은 GS칼텍스의 2번 선로다.

2번 선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GS칼텍스 내에 있는 개폐기는 1번, 2번 선로 모두 열려 전기 공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쪽에서 전력을 보내는 선로 2개 중 1개는 정상작인데, 전력을 받는 GS칼텍스 공장 내의 선로는 2개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GS칼텍스 2번 선로는 사고 발생 후 23분만에 전력 공급을 요청해 정상화됐지만 1번 선로는 공장 재가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 공급 요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독립된 용성선로와 GS칼텍스 선로가 영향 미쳤나=한전은 “사고가 난 용성선로와 GS칼텍스 2개 선로는 독립적인 장치로 어느 한쪽이 문제가 발생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의 정전 사고는 용성선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공장 내 개폐기 2개가 모두 이상이 발생한 것은 용성선로가 이상 작동하면서 독립적인 GS칼텍스 선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성선로가 이상이 생기면서 전력이 땅속으로 흘러 GS칼텍스 선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한전에서 설정한 전기보호 회로에 의해 공장 내 개폐기가 열린 것이지, 자체 고장이 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 관계자는 “여수화력 구내 13개 선로 중 왜 유독 GS칼텍스 선로만 이상이 났겠냐”며 “GS칼텍스 정전은 용성선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운전면허시험 기능·교육시간 축소 영유아 시설 3~5층에도 설치 가능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올 4월까지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 경비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확정된 개선과제 가운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 48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제처는 규제 완화 등에 따라 1% 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는 만큼 여기에 잠재성장률 3~4%를 합치면 5%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우선 각 부처에 대해 이들 하위법령을 2~3월 중 1, 2

차 정비토록 하되 미진한 것은 자체 주도로 4월까지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에는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 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 면허 취득에 드는 국민의 기회비용을 연간 6000억원 절감하는 방안과 현재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3~5층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돼지고기의 육질 등급 표시를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 객실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이번 정비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학 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구제역, 사람에게는 무해한가요?

주부 채지운씨가 궁금한 「구제역의 상식」

Q1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축산물을 먹어도 되나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개인 동물에서만 발병합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법 일 뿐 인체에 무해합니다.

Q2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면서
왜 매몰하나요?

다른 소·돼지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제역은 빠른 속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추가감염을 막기위해 매몰처분이 불가피 합니다.

Q3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더 이상
방역과 소독을 안해도 되나요?

더욱 철저히 해야합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기간(약 2주)과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한 달 정도는 소독과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